

제 19기 중견리더과정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위한 발전 방안

연구 요약

□ 연구목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된 귀농·귀촌 시책이 실질적인 실수요자에게 느끼는 체감과 괴리가 있어 지역특성 및 현장에 적합한 맞춤형 귀농·귀촌 시책 필요한 실정
-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하고 파악하여 적절한 정책적 대안 제시

□ 배경 및 필요성

-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
- 귀농·귀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요인과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안정적인 귀농·귀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

□ 기대효과(활용방안)

-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맞춤형·단계별 귀농·귀촌 정책을 운영하여 귀농·귀촌인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시스템 운영 활성화
- 귀농·귀촌 트렌드는 연령의 다양화와 귀농보다 귀촌 인구의 증가 등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하고 있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귀농·귀촌의 정책을 귀농·귀촌인 수요에 맞게 변화 도모

목 차

I. 서론	3
1. 주제의 선정동기	3
2.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3
3. 연구범위 및 방법	4
II. 귀농·귀촌 정의 및 제도적 지원 근거	4
1. 귀농·귀촌 정의	4
2. 제도적 지원 근거	4
III. 귀농·귀촌현황 및 사업 추진 실태분석	4
1. 귀농·귀촌 현황 분석	5
2. 귀농 후 재이농 현황(전국)	7
3. 귀농 지원 정책	7
1) 정부 귀농시책, 귀농 지원 정책	7
2) 경상남도 귀농시책	8
IV. 사례와 설문조사 분석	9
1. 귀농·귀촌 성공사례 분석	9
2. 공무원들의 퇴직후 귀농·귀촌에 대한 견해(설문조사)	11
V.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
VI. 결론	14
<참고문헌>	15
<부록> 귀농귀촌 관련 설문조사 결과	16~20

I. 서론

1. 주제의 선정 동기

- 사회경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삶의 가치관 변화와 인식의 변화로 귀농·귀촌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 이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의 은퇴** 증가와 전원생활에 대한 열망 등으로 귀농·귀촌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1년 귀농·귀촌 가구는 377,744가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 농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인구 감소와 노동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귀농·귀촌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된 귀농·귀촌 시책이 실질적인 실수요자에게 느끼는 체감과 괴리가 있어 지역특성 및 현장에 적합한 맞춤형 귀농·귀촌 시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하고 파악하여 적절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주제를 선정하였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2차(2022~2026)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발표하여 귀농·귀촌 인구의 수요 증가를 예상하여 지원정책 및 대책을 마련하였다.
-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
- 귀농·귀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요인과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안정적인 귀농·귀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기존의 귀농·귀촌 정책은 영농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정착 이후의 분석이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없었으며 체계적인 귀농·귀촌 관리체계는 미비하다.
- 귀농·귀촌으로 인한 인구 유입이 농촌지역으로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향후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귀농·귀촌 인력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또한, 귀농·귀촌인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별 모임이나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상호간 정보교류 및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귀농·귀촌인들의 협의체 구성·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연구범위 및 방법

- 공간적 범위: 국내
- 시간적 범위: 최근 3년간(통계자료는 최근 10년)
- 연구방법: 문헌연구, 사례연구, 설문조사 등 병행

II. 귀농 · 귀촌 정의 및 제도적 지원 근거

1. 귀농 · 귀촌 정의

- 귀농: 돌아갈 歸, 시골 農, 단어 그대로 귀농은 농사를 짓기위해 농촌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 귀촌 : 歸村은 귀농처럼 다른 목적이 아니라 작은 텃밭을 가꾸고 조용한 전원 생활을 즐기려고 도시에서 시골로 농촌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2. 제도적 지원 근거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국가의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근거는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이다.
- 주요 내용은 귀농어업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제공, 창업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귀농어업인(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 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 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제공, 창업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0.22.]

2) 지자체의 귀농인 지원 근거

- 지자체의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근거는 지자체의 "귀농인 지원 조례" 이며, 지 자체별로 조금의 차이는 지원내용에 대하여는 대동소이하다. 주요 내용은 귀 농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귀농인의 소득안정과 삶의질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Ⅲ. 귀농· 귀촌현황 및 사업 추진 실태분석

1. 귀농·귀촌현황 분석

- 통계청(2021년) 귀농귀촌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귀농가구는 14,347가구로 전년(12,489가구)보다 1,858가구(1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38명으로 전년(1.40명)보다 0.02명 낮게 나타났다.
- 귀농가구는 시도별로 경북이 2,710가구(18.9%)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2,564가구), 충남(1,800가구), 경남(1,689가구) 등의 순으로 많았다.
- 귀농가구주의 평균연령은 55.8세, 성별 구성비는 남자가 67.5%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구성비는 50대가 33.0%, 60대가 36.0%로 50~60대가 69.0%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60대와 70대 이상 비중은 증가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귀농가구의 74.5%는 1인가구로 나타났다. 귀농가구원만으로 구성된 단일가구가 86.8%, 농촌지역 거주자와 귀농가구원이 함께 가구를 구성한 혼합가구는 13.2%를 차지했다.
- 귀농가구원은 19,776명으로 전년(17,447명)보다 2,329명(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인은 14,461명으로 전년(12,570명)보다 1,891명(15.0%) 증가하였고, 동반가구원은 5,315명으로 전년보다 438명(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귀농인 중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농인은 9,814명(67.9%)이고, 다른 직업 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겸업 귀농인은 4,647명(32.1%)이었다.
- 2021년 귀촌가구는 363,397가구로 전년(345,205가구)보다 18,192가구(5.3%) 증가했다. 귀촌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36명으로 전년(1.38명)보다 0.02명 낮게 나타났다.
- 귀촌가구주의 평균연령은 45.2세, 성별 구성비는 남자가 60.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구성비는 30대가 21.8%, 20대 이하가 21.5%, 50대가 18.1%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귀촌가구의 75.2%는 1인가구로 나타났다. 귀촌가구원만으로 구성된 단일가구가 72.6%, 농어촌지역 거주자와 귀촌인이 함께 가구를 구성한 혼합가구는 27.4%를 차지했다.
- 귀촌인은 495,658명으로 전년(477,122명)보다 18,536명(3.9%) 증가했다. 평균연령은 42.8세였으며, 연령대별 구성비는 20대 이하가 26.0%, 30대 20.8%, 50대 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귀촌 전 거주지역은 경기도가 131,805명(26.6%)으로 가장 많고, 서울 72,658명(14.7%), 경남 33,032명(6.7%) 등의 순이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이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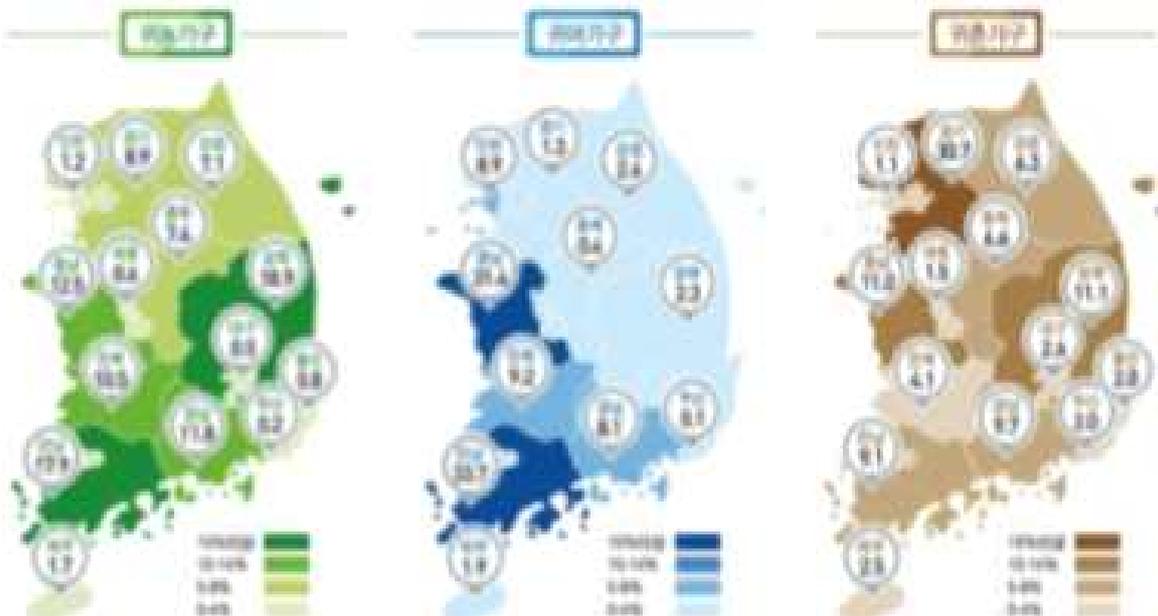
〈그림 1. 2021년 기준 귀농어·귀촌인 통계〉



귀농어·귀촌인 특성 (단위: %)



시도별 귀농어·귀촌 가구 분포 (단위: %)



2. 귀농 후 재 이농 현황(전국)

- 농림축산식품부 2021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2021) 의하면, 귀농귀촌 정착 실패 사유는 일자리 부족 34.6%, 소득 26.9%, 사업 자금 조달 15.4% 등으로 나타났다.
모두 경제적인 요인과 관련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또한, 응답자의 75% 이상이 귀농·귀촌 후 1년 내에 이전에 살던 도시나 다른 곳으로 재이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도시민들은 다른 때보다 바로 이주직후에 겪는 어려움 때문에 정착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3. 귀농 지원정책

1) 정부 귀농시책

정부는 제2차(2022~2026)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귀농창업자금 융자, 귀농인 주택마련자금 융자 등 지원하고 있으며, 5대 추진전략 및 16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제2차(2022~2026)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2) 경상남도 귀농시책

구분	지원내용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청년농업인 · 사업내용: 농촌에 정착한 청년농업인들이 지역문제 및 영농현장에로사항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 지원조건: 시군별 1개 단체 육성을 위한 운영비 지원 : 10백만원/개소 -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 강사료, 간담회 및 컨설팅경비, 회의비 등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만 18세이상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 사업내용: 경영실습임대농장(온실) 조성 · 지원조건: 개소당 300백만원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만40세 이상 만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이하 청년농업인 · 사업내용: 청년 창업농에 대한 농가경영비 등을 지원 · 지원조건 지원금액: 1인당 1년간 12백만원 - 자금용도: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 지급방법: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교육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인 턴) 만40세 ~ 45세 미만 미취업자 (인턴 채용대상자)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하는 일정 조건을 갖춘 농업법인, 선도농가 등 우수전문농업경영체 · 사업내용: 인턴을 채용한 생산자 단체, 선도 농가 등에 자금 지원 · 지원조건: 인턴 1인당 월100만원 한도(6개월간), 월보수의 50%, 연간 600만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만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 · 사업내용: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정착 및 성장을 위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월 최대 100만원 지원
귀농귀촌인 주거안정 지원(주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산청군 귀농인 · 사업내용: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목적으로 산청군 관내 농촌 빈집을 매수시, 매매가액의 10%(최대 5백만원) 지원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만65세 미만, 귀농 5년 이내인 실제영농종사자 · 사업내용: 귀농교육, 컨설팅비용,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등 지원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소요비용 · 사 업 량: 진주 7, 동영 1, 사천 3, 김해 7, 밀양 9, 거제 2, 양산 2, 의령 2, 함안 2, 창녕 9, 고성 3, 남해 7, 하동 13, 산청 11, 함양 4, 거창 3, 함천 5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신규농업인 현장실습을 마친자 및 귀농희망자 · 사업내용: 귀농인 창업을 위한 기본교육 · 지원조건: 보조100%

IV. 사례와 설문조사 분석

1. 귀농·귀촌 성공사례 분석

귀농·귀촌 성공사례 분석 귀농·귀촌 성공 사례는 경상남도에서 2022년 3월 귀농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이OO(경남 함양군, 57세)

1) 귀농인 정보

귀농연도	귀농전		작목명	영농규모	연소득	정보습득처
	거주지역	직업				
2017	경남창원	자영업	시설딸기 토마토, 수박	농지 6,940㎡ 비닐하우스9동 5,950㎡	8,000만 원	재배기술책자, 재배작목반 농가

2) 귀농 초기 애로사항

- 재배기술이전무하여 귀농 전 귀농정착지 재배농가와 작목반에서 무급으로 일손(5개월)을 도와주고 현장실습 체험으로 습득 연마
- 작목반 회원들과 재배 신기술 습득, 판매방법 등 지속적 공유
- 판매 전략을 위해 도매시장 현지방문(서울 가락동 등) 유통경로 등 시장조사와 자체 컨설팅 실시

3) 시사점

- 영농재배기술 교육 지원, 농작물 판로지원, 현장실습 지원 등으로 귀농시 어려움 해결, 따라서이 부분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 권OO(경남 거창군, 43세)

1) 귀농인 정보

귀농연도	귀농전		작목명	영농규모	연소득	정보습득처
	거주지역	직업				
2019	경남창원	회사원	시설딸기	7,000㎡ 비닐하우스	9,000만 원	행정

2) 귀농 초기 애로사항

- 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선배 귀농인과 행정의 도움으로 기존 설치한 시설하우스를 임대하였음.
- 지역민들의 귀농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으나 친화력으로이를 극복 할 수 있었음.

3) 시사점

- 귀농인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가 농지확보, 빈집에 대한 정보 부족을 들 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지원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 홍보 필요양한 정보제공 필요

3) 안OO(경남 합천군, 38세)

1) 귀농인 정보

귀농연도	귀농전		작목명	영농규모	연소득	정보습득처
	거주지역	직업				
2021	대구	인테리어	마늘, 양파	10,000㎡	2,000만 원	기술센터, 주변농가

2) 귀농 초기 애로사항

- 농기계 구입, 시설물설치 등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감
- 귀농자로 보조받는데 애로가 많음 (시설물을 늘리고 싶어도 경비과다 소요)
- 인건비가 비싸기계화로 대체하려고 해도 농기계가 비싸고 종류도 많아 구입할 엄두가 나지 않음
- 대농을 하고 싶으나 농지구입이 어렵고(자금부족) 집단화가 안 됨

3) 시사점

- 귀농인들을 위하여 창업자금,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초기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다양한 농업정책 자금지원이 필요

4) 정OO(경남 함양군, 32세)

1) 귀농인 정보

귀농연도	귀농전		작목명	영농규모	연소득	정보습득처
	거주지역	직업				
2019	부산	회사원	돼지감자 흑염소 농산물가공	농지 6,600 m ² 흑염소 200두 농산물 가공 공장198m'	30,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2) 귀농 초기 애로사항

- 외지인에 대한 고정관념 부정적 시각으로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 형성이 어려움
- 귀농인으로 지원보다 농업인 으로의 자격요건(농지원부 등재, 농지임대 방법 등)을 갖추는데 애로가 많음

- 편의시설 부족 및 자녀교육 등 교육환경 열악

3) 시사점

- 최근 30~40대의 귀농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편의시설 부족, 자녀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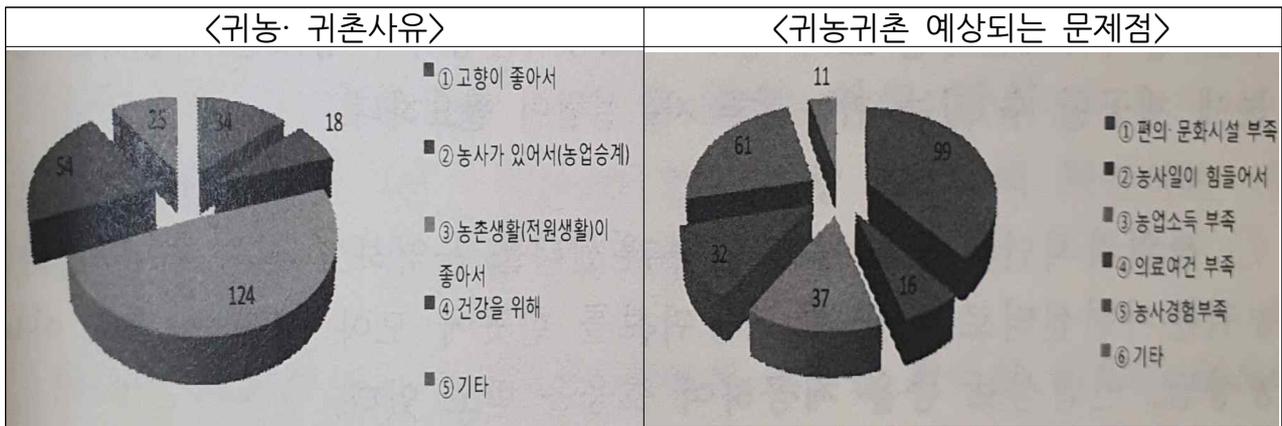
2. 공무원들의 퇴직후 귀농· 귀촌에 대한 견해(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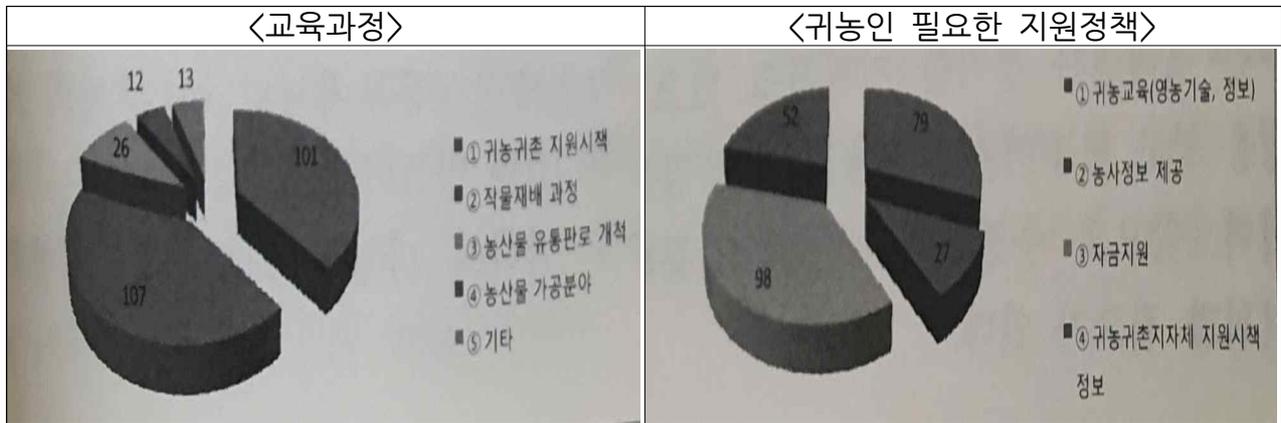
- 설문기간: 2022. 9. 5.(월) ~ 9. 8.(목), (4일간)
- 대 상 자: 경남남도인재개발원 교육생(302명)
- 응 답 자: 281명(93%)

2) 설문조사 결과

- 경상남도인재개발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퇴직후 귀농귀촌에 대한 견해 조사 결과 퇴직 후에 169명이 귀농귀촌 계획이나 의향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는 농촌생활(전원생활)이 좋아서(124명, 48.6%), 건강을 위해 (54명, 21.2%) 순으로 나타났다.
- 퇴직후 귀농· 귀촌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편의시설 부족(99명, 38.7%), 농업 소득 부족(37명, 14.5%), 의료여건 부족(32명, 12.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귀농 후 재이농 사유 비슷한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또한, 귀농에 대한 필요한 정보는 농사기술정보(85명, 32.7%), 토지·주택가격 정보(76명, 29.2%)순이며, 귀농교육은 작물 재배과정(107명, 41.3%), 귀농 귀촌 지원시책(101명, 39%)로 조사되었고, 귀농을 할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정책순으로는 농업정책자금 지원(98명, 38.3%), 영농 기술 및 정보교육(79명, 30.9%) 순이다.



V.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귀농 중심의 지원시책에서 귀촌중심으로 지원 범위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나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귀농 중심의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금은 귀농인구 보다는 귀촌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전망이다.
- **농촌지역 사회로 유입정책은 일자리와 삶의 기반은 도시에 두고, 단순히 거주 주택만 농촌으로 이주하는 것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자족할 수 있는 정주의 개념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실제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은 대부분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귀농보다는 **농촌생활 자체를 즐기려는 귀촌에** 큰 목적이 있다.
- 따라서, 도시민을 해당 지자체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귀농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귀촌 중심의 정책** 으로 확대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귀농귀촌 종합센터 활성화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귀농정책이나, 빈집정보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 일선 시군의 경우 해당시군 정보만 제공하면 되지만, 광역자치단체 인도의 경우 시군의 귀농귀촌정책과정보를 귀농귀촌 정보를 한눈에 제공할 수 있는 귀농귀촌 종합센터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의 활성화 및 종합센터 운영 안내와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3.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인과 주민간 교류행사 실시

- 도시민의 귀농귀촌 후 재이주 사유 중 하나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귀농귀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중 하나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문경시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귀농인 마을

주민 초대행사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귀농·귀촌인 교육을 위해 영상교재를 만들어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주민들과 소통과 갈등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4. 맞춤형 귀농교육 실시

- 귀농인들 애로사항 중 하나가 영농에 대한 이해와 기술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시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기술 지원센터에서 귀농인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으나, 주로 작물에 대한 재배기술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맞춤형 교육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경상남도에서는 매년 교육을 희망하는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귀농인들의 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농산물 가공, 일반작물 시설재배, 과수반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론과 실기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5. 귀농인 창업자금 융자사업의 개편

- 귀농인들의 조기정착과 초기 자금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귀농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고 있다.
- 하지만, 재산이 있고 담보물건이 있는 경우 쉽게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지만, 담보력이 되지 않는 경우 융자가 쉽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6. 농지주택 등 영농생활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 **귀농귀촌 초기 2~3년 동안이 귀농·귀촌인이 가장 어려움에 직면하는 시기로서, 초기 정착 과정이 귀농·귀촌 성공 여부에 중요하다.**
- 따라서, 귀농인들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는 있으나, 기존 지역주민들의 역차별 문제, 인근 시군 지원정책과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농촌지역 사회에서 우선 필요한 정책 시설 보완

- 도시민이 농촌지역 조기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 이농사유 중 하나가 열악한 편의시설, 의료시설, 교육환경 등이다.
- 따라서, 도시민이 가장 관심이 높은 교육, 건강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촌지역 사업체의 투자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마련하는등 농촌지역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귀농·귀촌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 과거 귀농·귀촌시책은 영농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 되었지만, 현대사회는 인생 100세, 2모작 시대를 맞이하여 삶의 가치관 변화와 인식이 과거와 크게 달라짐.현재,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귀농·귀촌문제는 **베이비 붐 세대(1955~1963)의 은퇴** 증가와 전원생활에 대한 가치 추구 등으로 과거와 다른 형태의 정책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여부는 그 해당 지자체 농촌경제 활성화를 가능할 수 있는 중용한 척도가 될 수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귀농귀촌 현황과 귀농인의 성공사례, 귀농 후 재 이농 사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귀농정책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 및 인구유입 시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우선, 해당 자치단체별 귀농귀촌 전담팀을 구성 . 운영해야 함.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귀농·귀촌인력 DB를 구축하여 귀농·귀촌인력 현황 파악과 문제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다.
- 귀농·귀촌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운영.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귀 농귀촌 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맞춤형· 단계별 귀농귀촌 정책을 운영하여 귀농귀촌 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귀농·귀촌 전문상담 프로그램 운영. 귀농·귀촌한 후 재 이농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 및 관련 전문 기관에서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사전 상담 및 예방상담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귀농·귀촌 트렌드는 연령의 다양화와 귀 농보다는 귀촌인구의 증가 등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귀농귀촌의 정책도 귀농·귀촌인 수요에 맞게 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농림축산식품부, 2021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2. 경상남도, 귀농 후 재 이농 현황(내부자료), 2021
3. 성주인, 김성안, 도시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0
4. 마상열,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식 조사와 시사점, 경남정책Brief, 경남발전연구원, 2020
5. 손상락, 경남지역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경남발전연구원, 2020
6. 김윤성, 최근 귀농·귀촌현황과 지원방향, 농협경제연구소, 2020
7. 박시현, 경남 농산어촌지역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부록 1]

귀농·귀촌 관련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인생 100세, 2모작 시대를 맞이하여 귀농·귀촌문제는 사회적 이슈 중 하나입니다. 베이붐세대인 교육생 여러분들의 관심사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귀농정착 지원을 위한 발전방안“ 을 개인 연구 과제로 정하고 과제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하고자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향후 퇴직 후 귀농귀촌 의향 등 몇 가지 항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설문조사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제19기 중견리더 과정

■ 문의처:

[귀농귀촌 관련 참고자료]

- 용어정의 : 도시생활을 중단하고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것을 귀농이라 하며, 퇴직 후 전원생활 등을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것을 귀촌이라 함.
- 2021년 귀농·귀촌 인구는 515,434명(전국통계임)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으며, 증가이유는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 증가와 전원생활에 대한 가치 추구 경향 확산 등임. -

귀농 · 귀촌에 관한 문항입니다(일반적 사항)

1. 귀하는 향후 퇴직 후 귀농 · 귀촌할 계획이나 의향이 있으시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고향이 좋아서 ② 농사가 있어서(농업승계)
 ③ 농촌생활(전원생활)이 좋아서 ④ 건강을 위해 ⑤ 기타
 2. 귀하는 향후 퇴직 후 귀농 · 귀촌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① 편의.문화시설 부족 ② 농사일이 힘들어서 ③ 농업소득 부족
 ④ 의료여건 부족 ⑤ 농사경험부족 ⑥ 기타
 3. 귀농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습니까?
 ① 귀농귀촌 박람회 ② 시군홈페이지(귀농귀촌 정보센터)
 ③ 귀농귀촌 정보센터 ④ 신문, 언론, 포털사이트 등 ⑤ 기타
 4. 귀농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어떤 정보를 원하십니까?
 ① 빈집정보 ② 토지.주택가격 정보 ③ 농사기술 정보
 ④ 귀농귀촌 교육정보 ⑤ 기타
 5. 귀농교육이 필요하시다면 어떤 과정의 교육을 원하십니까?
 ① 귀농귀촌 지원시책 ② 작물재배 과정 ③ 농산물 유통판로 개척
 ④ 농산물 가공분야 ⑤ 기타
 6. 귀농을 할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정책은?
 ① 귀농교육(영농기술, 정보) ② 농사정보 제공 ③ 자금지원(주택구입, 농지구입, 창업자원 융자 등) ④ 귀농귀촌에 대한 지자체 지원시책 정보
- ★ 귀하는 향후 퇴직 후 귀농 · 귀촌에 대한 계획이나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귀하의 인적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8.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9. 귀하의 거주지역은?(해당칸에 ○표 하세요)
 - 시()도(), 시()군()구(). 읍()면()동()
10. 귀하의 퇴직 예정시기는?
 ① 3년 이내 ② 5년 이내 ③ 10년 이내 ④ 그 이후

- 설문에 용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귀농·귀촌 관련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개요

- 설문일자: 2022. 9. 5.(월) ~ 9. 8.(목), (4일간)
- 대 상 자: 경남남도인재개발원 교육생(302명)
- 응 답 자: 281명(93%)
- 기 타 응답자 중 21명은 1~6항목에 체크하지 않아 집계에서는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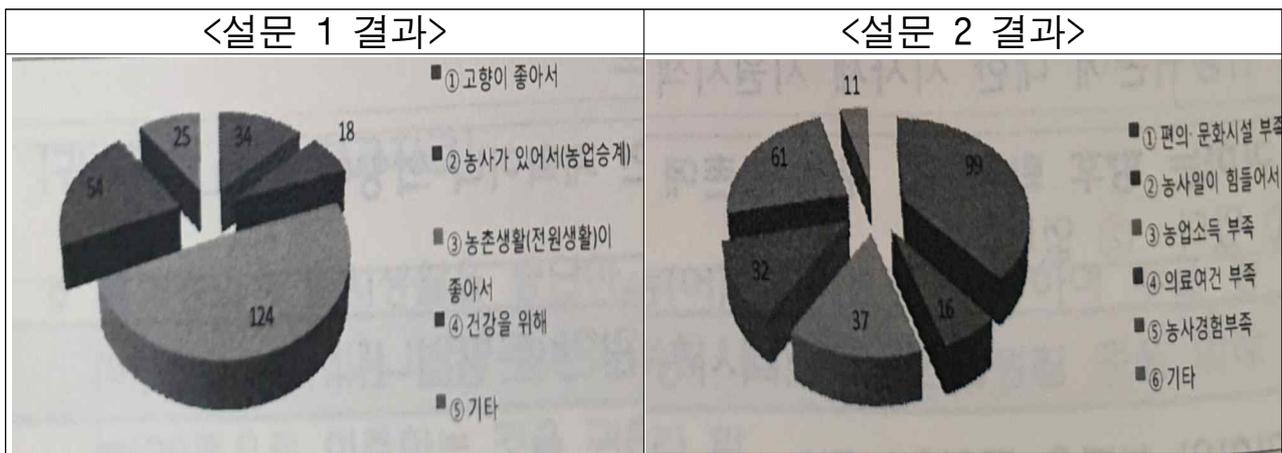
항목별 설문조사 결과

1. 귀하는 향후 퇴직 후 귀농·귀촌할 계획이나 의향이 있으시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고향이 좋아서(34명, 13.3%)
- ② 농사가 있어서(농업승계, 18명, 7.1%)
- ③ 농촌생활(전원생활)이 좋아서(124명, 48.6%)
- ④ 건강을 위해(54명, 21.2%)
- ⑤ 기타(25명, 9.8%)

2. 귀하는 향후 퇴직 후 귀농·귀촌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① 편의·문화시설 부족(99명, 38.7%)
- ② 농사일이 힘들어서(16명, 6.3%)
- ③ 농업소득 부족(37명, 14.5%)
- ④ 의료여건 부족(32명, 12.5%)
- ⑤ 농사경험 부족(61명, 23.8%)
- ⑥ 기타(11명,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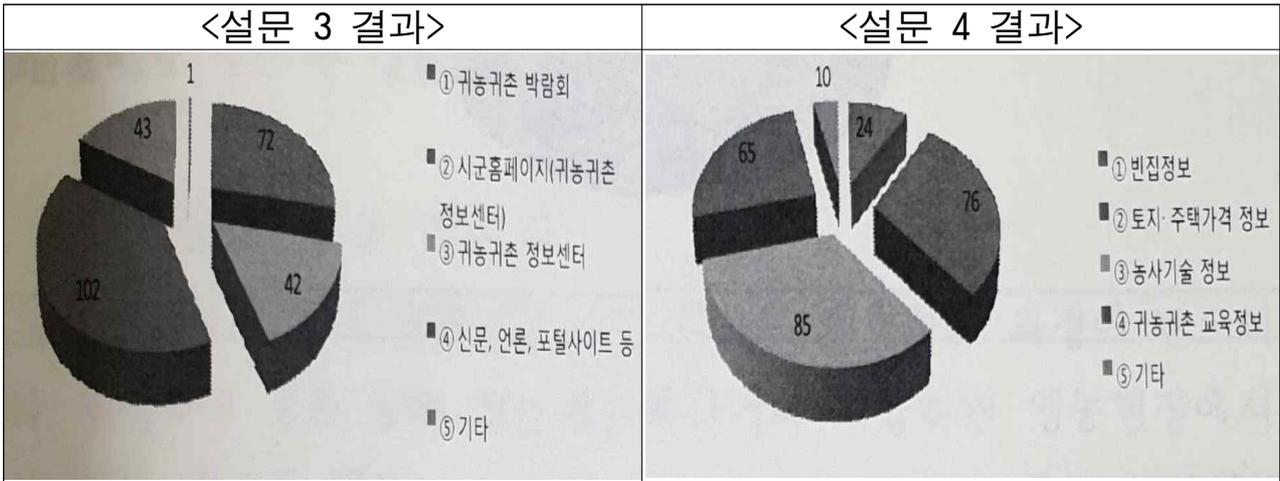


3. 귀농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습니까?

- ① 귀농귀촌 박람회(1명, 0.4%)
- ② 시군홈페이지(72명, 27.7%)
- ③ 귀농귀촌 정보센터(42명, 16.2%)
- ④ 신문, 언론, 포털사이트 등(102명, 39.2%)
- ⑤ 기타(43명, 16.5%)

4. 귀농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어떤 정보를 원하십니까?

- ① 빈집정보(24명, 9.2%) ② 토지·주택가격 정보(76명, 29.2%)
- ③ 농사기술 정보(85명, 32.7%) ④ 귀농귀촌 교육정보(65명, 25%)
- ⑤ 기타(10명,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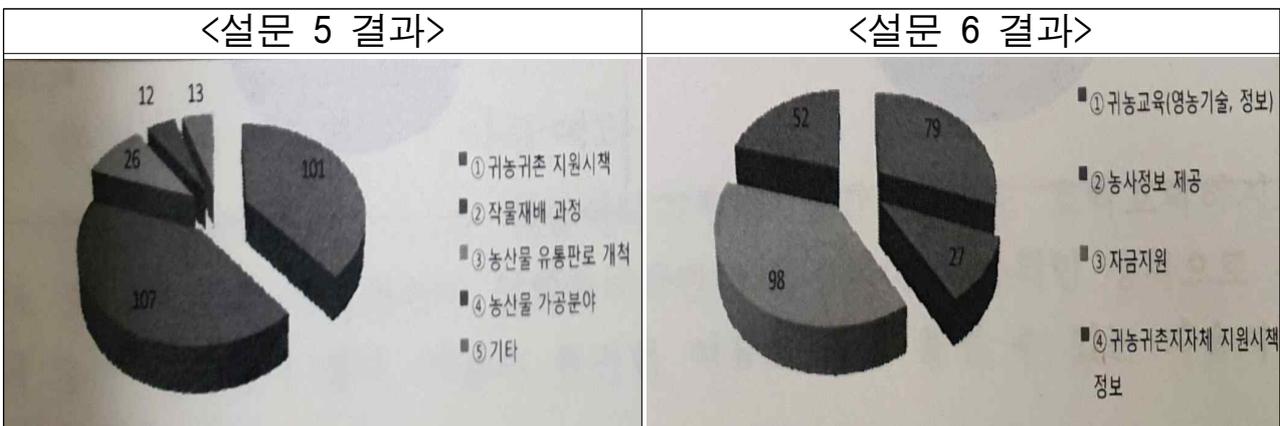


5. 귀농교육이 필요하시다면 어떤 과정의 교육을 원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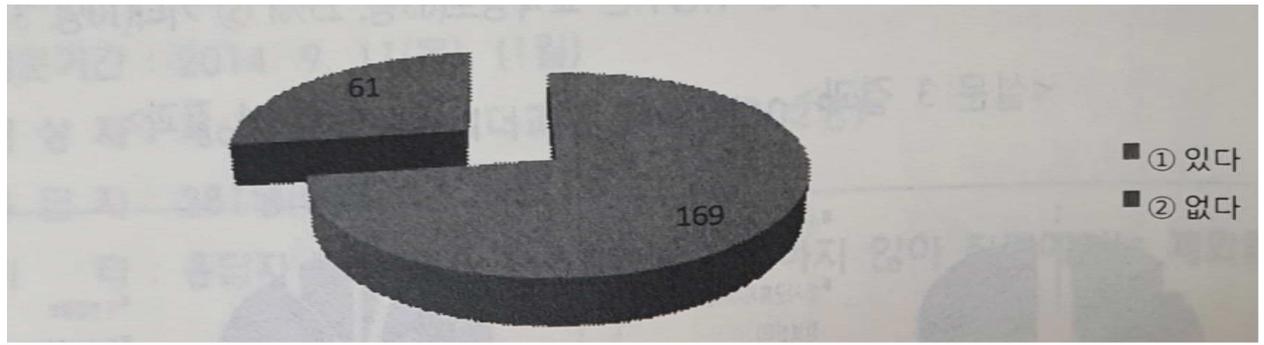
- ① 귀농귀촌 지원시책(101명, 39%) ② 작물재배 과정(107명, 41.3%)
- ③ 농산물 유통판로 개척(26명, 10%) ④ 농산물 가공분야(12명, 4.6%)
- ⑤ 기타(13명, 5.0%)

6. 귀농을 할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정책은?

- ① 귀농교육 - 영농기술, 정보(79명, 30.9%) ② 농사정보 제공(927명, 10.5%)
- ③ 자금지원 - 주택구입, 농지구입, 창업자원 융자 등(98명, 38.3%)
- ④ 귀농귀촌에 대한 지자체 지원시책 정보(52명, 20.3%)



* 귀하는 향후 퇴직 후 귀농·귀촌에 대한 계획이나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169명, 73.5%) ② 없다(61명, 26.5%)



7.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227명(89.4%) ② 여자 27명(10.6%)

8. 귀하의 거주지역은?(집계는 생략함)

9. 귀하의 퇴직 예정시기는?

① 3년 이내 (82명, 31.5%) ② 5년 이내(87명, 33.5%) ③ 10년 이내(68명, 26.2%) ④ 그 이후(23명, 8.8%)

